中 경기부양책 '나홀로' 유동성 풀기… "긴축 리스크 더 커"

차이나 뉴스&리포트

3개월새 지급준비율 0.25%P↓
LPR 1년만기 3.65%, 5년 만기 4.30%
기준금리 7개월 연속 동결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관광객들이 자금성으로도 불리는 고궁을 방문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나홀로' 유동성 풀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는 동결했지만 지급준비율은 재차 인하하면서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두고 선진국의 급격한 긴축이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됐다고 경고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실질 기준금리인 3월 LPR를 1년 만기는 3.65%, 5년 만기 4.30%로 동결했다. 작년 8월 금리 인하 이후 7개월 연속 동결이다.

인민은행은 매달 시중은행이 보고한 금리를 취합해 LPR을 고시한다. 동향을 취합한다고 하지만 인민은행이 정책 지도 등을 통해 금리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보통 LPR 1년물은 기업대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

인민은행은 "경제에 질적 성장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촉진하고 거시정책을 잘 조합하며 실물경제에 더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온건한 통화정책을 정확하고 힘 있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년물 금리는 지난 15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75%로 고정하면서 동결이 예고됐다. 그러나 이때도 MLF에서 2810억위안(한화 약 53조원)을 순공급하고,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으로 1040억위안을 풀었다.

5년물 금리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면서 일단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11개월 연속 하락했던 중국의 평균 집값은 올해 1~2월 상승세로 전환됐다.

경기 침체에 금리 인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을 감안하면 금리차가 더 확대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대신 다른 수단을 택했다. 지준율 인하다.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에 앞서 지준율을 0.25%포인트(p) 인하해 유동성을 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지준율 인하는 작년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현금 비율을 말한다.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은 시중에 풀 수 있는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이달 초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준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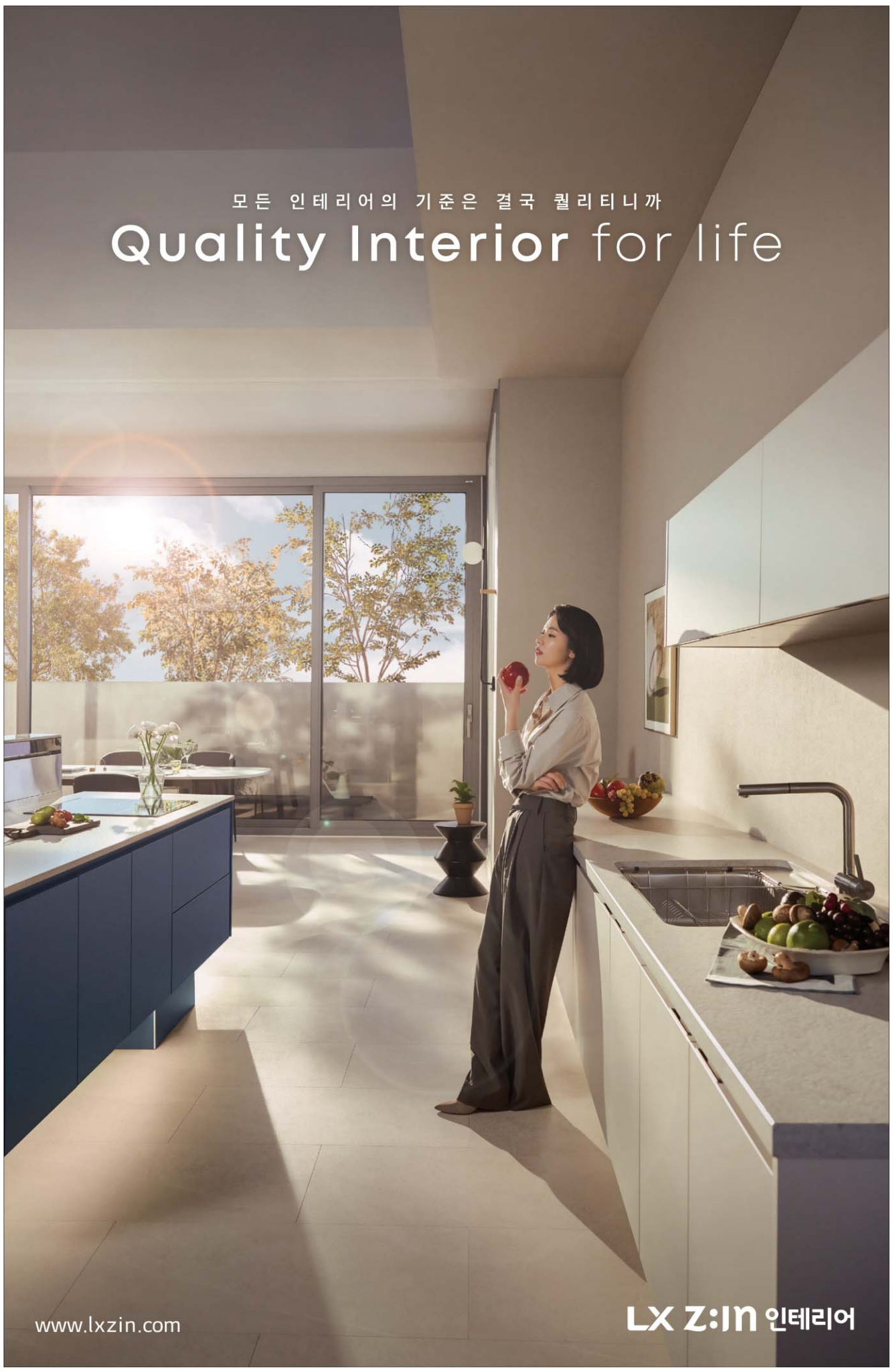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5000억위안(한화 약 95조원)이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SVB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유동성 위기 등도 중국이 '나홀로' 통화완화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쉬안창넝 인민은행 부총재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선진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며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는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차이 중국 수출입은행 부총재는 "앞으로 '회색 코뿔소'와 '블랙 스완' 같은 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이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하락, 국제 수지 악화, 채무 불이행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UAE 셔틀경제협력단, 20억달러 성과

산업부, 34개 기업과 '합동 세일즈'
비즈니스 상담회서 930만달러 추가

정부가 올해 1월 한-UAE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과 원팀을 구성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2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와 신산업 관련 5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34개 기업으로 구성한 '한-UAE 셔틀경제 협력단(셔틀경제 협력단)'이 지난 15~16일 UAE를 방문해 세일즈를 펼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셔틀경제 협력단은 앞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UAE 성과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한-UAE 정상외교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력단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에너지 플랜트사와 메디톡스, 메인정보시스템, 넥스트온 등이 참여했다.

협력단은 양국 고위관료와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방산 분야 케이테크는 20억달러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에너지 분야 '수소연료전지 융복합 사업'과 '가상현실 SW 수출', '스마트팜 협력' 등 5건의 MOU를 체결했다.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제일산기와 에스엠테크 등 우리 중소기업 11개사와 UAE 바이어·투자사 간 65건의 1대 1 상담을 실시하고 약 930만달러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정부 고위급 회담에서는 올해 1월 정상순방 계기 체결한 TIPF 후속으로 디지털·바이오 EPA 협의 등을 통해 정상외교 성과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 우리기업의 UAE 에너지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수소·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투자 협력 방안과 칼리파 왕립 병원 수탁운영 수주 지원 등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합동 세일즈를 펼쳐 향후 UAE 시장참여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며 "중동 관련 기존·신규 사업과 양자 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제2차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본부장은 최근 초안이 발표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법(NZAI)과 관련 "IRA와 같은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요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눈에 드러나는 차별은 없다고 보지만 시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외국기업 피해가 있다면 문제가 되기때문에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법안 초안의 대기업 자체 감사는 공급망 관리를 잘하라는 신호이지만 과도하게 할 경우 (기업)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초안 발표 이후 내용이 바뀌게 된다.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기업들이 문제삼는 부분 파악해 협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EU 법안이 집행위 초안에 이어 의회와 각료이사회를 거치고 향후 법안 완성까지 1~2년 소요되는만큼, 지속적으로 산업계 영향 분석해 우리 산업계에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신뢰와 경제통상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